
칠레 신헌법이 부결된 이유

노암 티텔만 / 토마스 레이튼

경제학자 / 에르푸르트 대학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석사 재학

원제와 출처: Noam Titelman y Tomás Leighton, “¿Por que ganó el rechazo a la nueva Constitución chilena?”, *Nueva Sociedad*, No. 301, septiembre-octubre de 2022, pp.4-14.

핵심어: 제헌의회, 정체성, 신헌법, 칠레

1년 전 헌법 제정 과정의 단순한 절차로 계획되었던 국민투표는 칠레 진보 세력의 가혹한 패배로 끝났다.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여주었던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는 거의 25% 포인트 차이로 찬성표를 압도했고, 전국 346개 자치구 중 8개 지역을 제외하고 승리했다. 승자들은 거리에 나와 “재건” 헌법안과 “보복주의”에 맞서 “칠레의 영혼”과 “칠레인들의 상식”이 승리한 것을 축하했다.

칠레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지지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던 헌법 제정 과정이 어떻게 좌절되었을까? 그렇다면 헌법 제정 과정을 지지하던 흐름은 어디로 갔을까?

이 헌법 제정 절차는 2019년 11월 15일에 시작되었다. 그해 10월 대규모 시위의 결과로 주요 정당들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새 헌법을 위한 일정을 확정했다. 첫 번째 이정표는 독재 시절 만들어진 헌법을 폐기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제헌의회가 새 헌법을 마련하도록 78%의 찬성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준 국민투표였다. 선거 결과는 투표율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적 분포에서도 인상적이었다. 새 헌법 제정에 반대하는 지역은 경제 엘리트들이 거주하던 상징적인 세 지역을 포함한 5개 행정구역에 불과했다. 몇몇 사람들은 선거 결과로 보면 칠레는 좌우 파로 양극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엘리트 계층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동질적인 국민'과 이에 대립하고 있는 '엘리트 계층'이라는 개념은 이들이 주로 거주하던 "세 행정 구역"이라는 언급을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정치적 논쟁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어휘가 되었다.¹⁾

진보 사회단체들은 제헌의회 선거 이전에 정당들과 협력하여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매우 특별한 조건들을 얻어냈다. 제헌의회를 구성할 때 젠더에 있어 평등, 원주민 부족에 대한 쿼터 마련, 2019년 시위에 나타난 강력한 반(反)정당 정서에 따라 무소속 후보 등록을 위한 몇몇 우호적인 장치 마련 등이 그 내용이었다. 특히, 정당과 연대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들이 정당 명부와 동일한 무소속 명부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제헌의회 선거 결과는 2019년 시위 이전의 정치로 돌아갈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칠레의 전통적인 두 정치 연합은 보잘 것 없는 성과를 거뒀다. 우파 연합은 20%라는 최악의 득표율로, 잠재적인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1/3 의석도 얻지 못했다. 중도좌파 연합에서는 중도와 보다 온건 세력들이 붕괴했다. 아마 이 위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기독교민주당으로 당선자는

1) Juan Pablo Luna: 'El problema de las tres comunas: cómo evitar que las elites dominen la Constituyente' en CIPER, 26/10/2020.

당대표가 유일했다. 그러나 제헌의회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 2019년 시위를 통해 등장한 무소속 후보들이 거둔 압도적인 승리였다. 155명의 제헌의회 의원 중 103명은 전통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진보 세력, 특히 2019년 시위 이후로 페미니즘, 원주민주의, 과격한 반(反)엘리트 담론을 주장했던 새로운 정치세력이 절대 다수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제헌의회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 국민들의 분위기는 매우 우호적이었다. 국민 중 52%는 새 헌법 제정 과정이 가져온 감정으로 “희망”을, 46%는 “기쁨”을 선택했다. 향후 몇 년 동안 진보와 좌파 세력은 이런 낙관론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고민하게 될 것이다.

약화된 제헌의회

더 많은 데이터가 공개되고 토론이 진행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더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의무 투표(다른 선거에는 사용되지 않음)로 인해 이전 선거에는 투표하지 않았던 5백만 명이 추가로 투표를 하게 한 상황 속에서 9월 4일 국민투표 결과를 설명하는 두드러진 이유는 세 가지다.²⁾

- (a) 제헌의회에 등장한 보여주기 정치에 대한 거부
- (b) 전통 정당과 제헌의회와의 동질화
- (c) 새 헌법제정 과정에서 하위주체 정체성들이 가지고 있던 힘에 대한 전통적인 정체성들의 반발

보여주기 정치는 제헌의회의 토론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들 중 하나였다. 곧

2) Ricardo González: 《Retorno del voto obligatorio: quiénes fueron los nuevos votantes》 en CIPER, 8/9/2022.

제헌의회를 진보적인 대의를 추구하던 활동가들의 일종의 비밀회의로 의심했던 우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다.³⁾ 결론적으로 사회운동가 출신 의원들에게 시위를 중단하는 것이 배신이라면, 일부 유권자들, 특히 질서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시위는 하나의 악몽이었다.

몇몇 의원들은 전통적인 정체성을 자극하는 변장과 선언들을 포함한 거리의 퍼포먼스를 통해 유명세와 사회적 정당성을 얻은 바 있다. 거리 시위 이후로 구호와 노래를 통해 권위에 대한 공격 또한 빈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권력과 권위에 맞서기 위한 적절한 행위로 받아들여졌던 행동들이 제헌의회 내에서 벌어지자 다른 관점으로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어, 한 쌍의 의원들이 피카추와 공룡의 의상을 입고 의회에 나왔고, 다른 의원은 총회에서 기타를 치면서 농담을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칠레에 접두사 “pluri”(다국적을 의미하는)를 추가한 다른 애국가 가사를 제안하고 불렀다. 몇몇 의원들은 제헌의회 의원의 역할을 개인적인 목적을 드러내는 것으로 착각했다. 한 의원은 자신이 걸린 압과 항암 치료비를 낼 수 없는 사정을 투쟁의 깃발로 삼았다. 그러나 언론의 심층 보도에 따르면 압은 거짓말이었고 가슴에 꽂혀있는 화학 요법 도관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제헌의회에 큰 타격을 주었다.

게다가 제헌의회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행동들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시위의 정신 지속되었다. 독재 시기의 헌법을 대체하여 새 헌법을 만들어야 하는 바로 그 공간에서 말이다. 이러한 사례들 중 몇몇의 경우 극단적이고 자극적이며 상징적인 안들을 제시하는 것에 치중했다. 비록 이런 안들이 승인될 만한 충분한 표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지만 말이다.(예를 들어, 어떤 의원은 모든 국가 권력 기관을 해체하고 의회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3) Roberto Martínez: «Cadem: confianza en la Convención Constitucional llega a su punto más bajo desde su proceso de instalación» en *La Tercera*, 8/3/2022.

언론은 이런 에피소드들을 과장했고, 가장 엉뚱할 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의 공격적인 가짜 뉴스들을 통해 왜곡된 안들을 퍼뜨렸다. 이와 보조를 맞춰 가장 엉뚱한 안들이 새 헌법 반대를 위한 캠페인과 텔레비전 선거 광고에 등장했다. 처음에는 화려하고 시선을 끌었던 것들이 결국에는 불안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제헌의회와 전통 정치의 동질화는 반(反)제도적이고 기성 질서 해체적인 정치가 강력하게 추진되던 배경에서 출현한다. 공공연구소(Centro de Estudios Públicos)의 데이터에 따르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6년 인구의 53%에서 2019년 19%로 떨어졌다. 또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주요한 정체성을 “전통적인” 정당에 반대하는 입장에 둔 유권자가 무려 12.9%에 달한다.⁴⁾ 제헌의회의 힘은 처음에는 전통적인 정치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왔다.

역설적이게도 보여주지 정치의 사용과 남용 그리고 명분 싸움들로 인해 제헌의회 의원들은 이런 관행이 빈번했던 전통적인 정치 및 의회와 닮아갔다.⁵⁾ 어쨌든 적어도 그들은 합의에 도달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전통적인 정치인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헌법 제정 과정 중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새 정부는 헌법 제정 절차의 시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특히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의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헌법 제정 절차에 대한 반대가 새 정부에 반대하는 수단이 된 것이다. 정치적 제도성에 반대하는 세력의 일부는 반대 측으로 넘어갔다.

전통적인 정체성들의 반발과 관련하여, 새 헌법의 첫 조항은 칠레를 “사회적

4) Carlos Meléndez y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Political Identities: The Missing Link in the Study of Populism» en *Party Politics* vol. 25 No 4, 2019.

5) J.P. Luna: «Los partidos no funcionan distinto a los independientes» en *Tercera Dosis*, 30/8/2022.

이고 민주적인 법치국가”로 규정하고, 이 국가가 “다민족적, 상호문화적, 그리고 생태적”이라고 선언했다. 칠레를 다민족 국가로 정의하면서, 원주민 공동체들에 몇몇 집단적 권리를 부여했고, 원주민들의 사법 제도를 제안했다.

제헌의회 의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이어 새 헌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이 다민족성이다. 이런 입장처럼 헌법 초안이 제출된 이후 에스파시오 푸블리코- 입소스(Espacio Público-Ipsos)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된 두 가지 조항은 다민족 국가와 원주민 사법제도 설립이었다.⁶⁾ 그래서 새 헌법 반대 세력은 다민족성 개념에 위협을 느꼈던 칠레성(chilenidad)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정체성들을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애국가, 국기, 그리고 기타 국가 상징물에 대한 경멸적인 언급이나 행동들을 포함해 제헌의회 의원들의 몇몇 퍼포먼스와 행위들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입장들이 헌법 본문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새 헌법 반대 캠페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번째 국민투표

최종 국민투표를 앞두고 정치세력들의 입장에는 큰 이변이 없었다. 기독교민주당부터 좌파까지의 정당들은 찬성을 명확히 했다(일부 지도자들이 당론에 반기를 들었지만 말이다). 모든 우파 정당은 반대편에 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진영 내에는 이질성이 있었다. 일부 개혁 조치들을 통해 현행 헌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새 헌법 제정 과정이 등장하게 된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사

6) BHP, IPSOS y Espacio Público: «¿Cómo vemos el proceso constituyente? Miradas a un proceso histórico, vi entrega», 7/2022, disponible en <<https://espaciopublico.cl/wp-content/uploads/2022/08/Informe-sexta-entrega-v6.pdf>>.

이의 차이가 상당히 일찍부터 나타났다. 선거전이 진행되면서 두 번째 입장은 반대편의 모든 입장들을 공격했다.

찬성 측에서는 새 헌법이 통과된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논의를 강력하게 제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전이 진행되면서 찬성 측이 상당한 수준으로 열세가 됨에 따라 새 헌법에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하게 된다. 게다가, 이런 변화를 약속하여 국민들이 가진 몇몇 불쾌감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민족성 개념에 대한 거부감이 대표적이다. 이는 찬성 측이 반대 측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찬성 편 투표자의 절대 다수가 새 헌법이 통과되더라도 수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일련의 여론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선거전이 상당히 진전된 후 입장에는 다소 차이들이 있었지만 정당들은 국민 투표 후의 정치 시나리오들에 대해 합의했다.

결국 두 가지 선택지가 있던 국민투표는 실제로 찬성, 개혁을 위한 찬성, 반대, 그리고 갱신을 위한 반대라는 네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 카뎀(Cadem)이 실시한 국민투표 이전의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17%가 반대를 지지했으며, 갱신을 위한 반대 35%, 개혁을 위한 찬성 32%, 그리고 제헌의회의 헌법 초안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은 12%에 불과했다.

최종 국민투표에 나타난 반대 결과는 개헌 여부를 물었던 국민투표의 결과와는 매우 달랐다. 반대 입장은 엘리트들의 구역인 “세 행정 구역”보다 실질적으로 더 넓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회 부문들로 확산되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반대는 큰 차이 없이 모든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승리했으며 이는 9월 4일에 확인되었다. 찬성이 압도적이어야 했을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서민 주거지들에서도 찬성은 간신히 이길 수 있었다.

차이가 있었던 곳은 유권자들의 이념적 프로필에서였다. 좌파 지지자들 사이에서 찬성이 여유 있게 승리했고, 반대는 우파와 중도 지지자들, 그리고 무당파

사이에서 대다수였다. 또한 연령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찬성이 다수였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반대가 다수였다. 즉, 개헌 여부를 묻던 국민투표와 달리 반대 측이 찬성 측보다 더 다양한 사회 정치적 동맹을 형성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게다가, 의무 투표와 국민투표에 대한 관심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냈다. 1,3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인구의 약 85%가 참여한 가운데, 반대가 얻은 780만 표는 개헌 여부 국민투표 총투표수를 넘어섰다. 초기의 분석들에 따르면 이러한 대규모 참여는 덜 정치화된, 아마도 좌우파를 지지하지 않는 서민 계층이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반대 측이 승리한 이유

이 지점에서 찬성에 대한 지지가 하락하고 반대가 증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해석이 등장한다. 첫 번째는 “중도 투표자”를 강조하는데, 이는 2019년 시위의 에토스와의 갑작스러운 단절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하나는 새 헌법 안에 반대하여 강화된 전통적인 반동적 정체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2019년 시위가 분명 반(反)엘리트적이지만 그렇다고 꼭 “좌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논쟁 중인 프로젝트

첫 번째 해석에서 개헌 여부 국민투표와 제헌의회 선거는 ‘국민 대(對) 엘리트’ 갈등이라는 프레임에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정치 구도는 좌파와 우파 사이,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던 다양한 이익과 관점들 사이의 차이들을 상당 부분 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에 따르면 이제 “위”와 “아래” 사이의 갈

등의 시기가 끝나고 그 대신, 좌파와 우파 간의 고전적인 갈등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의미에서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대 측이 마약과의 전쟁 및 경제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찬성 측이 사회적 권리들을 통한 부의 재분배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전자가 전형적으로 우파와 관련되고, 후자는 좌파와 연결되는 속성들이다.

이 관점이 시사하는 바는 현행 헌법이 중도 유권자의 “오른쪽”에 있는 반면, 거부된 헌법안은 그의 왼쪽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갱신을 위한 반대”와 “개혁을 위한 찬성”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난 것을 설명해준다. 또한 국민투표가 정치적 스펙트럼의 중도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확실히 해 준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헌법을 제정하면서 정치제도와 같은 몇몇 핵심 주제에 대해 우파와의 합의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론조사 응답자의 77%가 몇몇 주제에서는 양보를 의미할지라도 합의를 위한 협상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61%는 제헌의회 의원들이 그들의 입장을 양보하지 않았다고 느꼈다.

한편 선거 쟁점들은 여러 개의 동시적인 축에서 진행되었다. 동일 유권자간 한 축에서 더 왼쪽에 위치하고(예를 들어, 사회적 권리에 대해), 다른 축에서 더 오른쪽(예를 들어, 다민족성에 관한)에 위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중도적 입장들에 대한 지지는 사람들이 몇몇 주제에 있어서는 개별 조항 보다 “왼쪽”에 있고, 또 다른 주제에 있어서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안된 안들을 추가하고 빼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안은 다수가 선호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찬성 측 선거전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통합적인 레토릭을 만들어 낼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볼리비아 같은 나라의 헌법 제정 과정과 달리 칠레의 경우는 개별적인 요구들을 주장하기 위해 선출된 많은 제헌의회 의원들로 인해, 입장들과 요구들이 극단적으로 분열되었다는 것이다.⁷⁾ 정당의 존재감 약화,

리고 지역 집단에 기반을 둔 다수 무소속 의원들의 존재는 이러한 분열을 심화시켰다. 예를 들어, 이것은 텔레비전 선거 캠페인에 드러났다. 내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 캠페인은 새 헌법안이 부결되면 헌법 제정 과정을 계속해 반목이 아닌 국가 통합을 진작하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통합해내는 데 성공했다. 반면 찬성 측 캠페인에는 서로 다른 요구들과 관련된 다양한 조문들을 지지하는 집단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다.

요컨대 국가에 끼치는 부담을 고려하면 전체 개별적인 요구들이 국가적 프로젝트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새 헌법이 물 민영화를 끝내고 환경보호를 강력하게 보장하고자 했지만, 반대 측이 페토르카(Petrorca)나 쿼테로-푸초노비(Quintero-Puchuncavi) 같은 환경 피해에 맞서 시위가 벌어졌던 상징적인 지역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특히 의미가 있다. 또는, 원주민 공동체들을 인정하려는 헌법의 많은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공동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새 헌법안을 긴 쇼핑 목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결국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이다.

논쟁 중인 나라

두 번째 관점은 “위”와 “아래” 사이의 갈등 에토스가 유지되었지만 이러한 반엘리트적 입장은 헌법 제정 과정에서 우파적으로 변화했다고 가정한다. 즉, 2년 동안 벌어졌던 일들로 인해 우파는 저항, 나아가 그때까지 좌파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던 분노를 놓고 좌파와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⁸⁾ 좌파와 우파 사이에 위치한 온건 중도를 강화하는 대신, 전통적인 사회적 정체성의 강화와 정치화가

7) 이렇다고 해도 볼리비아의 새 헌법은 최종 국민투표에서 승인되기 전에 의회에서 백 개 이상의 조항들이 수정되었다.

8) Ver Pablo Stefanoni: *¿La rebeldía se volvió de derecha?*, Siglo Veintiuno, Buenos Aires, 2021.

진행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비(非)극단적인 입장들(“개혁을 위한 찬성”과 “깡신을 위한 반대”)이 강화된 것은 많은 시민들이 현재의 정치적 갈등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복잡한 사회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릴리아나 메이슨이 설명하듯이,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동질성이라는 특징을 가질 때 정서적으로 극단화되는 경향이 있다.⁹⁾ 반대로 복합적인 정체성들은 탈(脫)극단화를 진작한다. 즉,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당파적, 계급적, 종교적, 나이, 민족적, 또는 거주지에 따른 정체성에 따라 국민투표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겨진” 것이다. 이것은 갈등을 바라보는 중간자적 입장들을 배제하게 된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헌법 제정 과정이 가진 한계는 전통적인 정체성들을 새 헌법이 만들어지는 상징적인 과정에 통합하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다민족성을 포용적 애국주의의 틀 내에서 풀어내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몇몇 제헌의회 의원들이 보여준 불협화음을 야기하는 선언들과 퍼포먼스들에서 분명하게 두드러진다. 더 이상 저항의 편이 아니라 이제는 권력의 편에서 행해진 이러한 행동들은 전통적인 국가적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경멸하는 담론처럼 보였다. 또한 다양성의 틀 내에서 평등성을 보다 명시적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의 규정들이 있다. 예를 들어, 원주민 자치와 사법 제도의 경계들이 보다 명시적으로 만들어졌다.

찬성과 반대 사이의 차이는 농촌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고, 이는 다시 전통적인 관습과 정체성들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반대 측은 새 헌법을 애국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효율적으로 프레임화했고, 찬성 측 캠페인은

9) L. Mason: 《A Cross-Cutting Calm: How Social Sorting Drives Affective Polarization》 en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80 No 51, 2016

오히려 이 주제에 대한 새 헌법의 모호함이 야기한 두려움들을 심화시켰다.

역사적으로 칠레의 진보주의가 칠레 정체성을 위해 해온 오랜 헌신의 과정을 고려할 때 조국의 상징들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놀랍다. 이미 1939년 페드로 아그레 세르다와 마르마두케 그로베의 인민전선(Frente Popular)은 정권의 방향성으로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칠레성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 후 1970년대에 살바도르 아옌데 정부는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들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끌며, “사회주의에 이르는 칠레의 길”을 주도했다. 아옌데 정부의 상징은 “엠파나다와 적포도주 맛을 지닌” 칠레식 사회주의였다. 혁명을 명분보다는 경제적 성격의 제2의 독립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조국에 대한 대통령의 자부심을 매우 커서 친한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칠레의 아옌데”라고 부를 정도였다.

민주주의가 회복되었을 때, 중도좌파는 피노체트 독재정권에 빼앗겼던 국가 상징들을 되찾고자 노력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군부가 국가주의 기획에 발맞춰 포고령으로 변경했던 애국가를 복원했다. 독재 정권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 이후 진보주의와 애국적 정체성들을 다시 결합해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를 떠맡는다는 것은 칠레를 한 목소리로 만드는 것을 의미했다. 민주주의 회복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파트리시오 아일윈 전 대통령은 조국의 건국자들이 물려준 가치에 충실한 국민적 화해라는 약속을 내걸었다. 그런 다음 그는 “갈등을 극단화하지 않고 합의된 방안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정의된 칠레의 영혼을 회복하자고 말했다.

진보주의와 국가 정체성의 길들은 어느 때 갈라졌는가? 1978년 스페인 국민들 또는 1988년 브라질 국민들과 달리 칠레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회복할 때 새로운 헌법을 만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 독재자 피노체트는 권위주의적 기구들 중에서 상원의원이자 군 총사령관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인권 침해

에 대한 면책 처분으로 인해 화해의 열망과 더 깊은 의미에서 국가 상징의 회복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1980년에 통과된 독재 헌법이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분열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일부 국민들은 공화국의 기본 원칙들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다른 일부는 계속해서 전통을 옹호했다.

그런 식으로 볼 때, 새 헌법 제정 과정은 아일윈이 연설에서 약속한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즉, 헌법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천착을 통해 국민과 국가적 상징들 사이의 화해를 이루는 것 말이다. 사실, 헌법 제정 논쟁 동안 논의된 개념 중 하나는 전후 독일에서 대중화된 “헌법적 애국주의”였으며, 이에 따르면 정치 공동체의 통합성은 헌법이 제공하는 공통의 합의들에 있다. 그 틀 안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은 국가가 동질적인 전체가 아니라는 이해 속에서 애국적 정체성과 양립할 수 있다. 동시에 칠레의 광범위한 부문들이 칠레 역사에 대해 진행한 평가들을 문제 삼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그 기회는 사라져 버렸다.

세 번째는 패배?

아마 헌법 제정 과정의 교착상태를 피해야 한다는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새로운 헌법 제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일정한 합의가 있는 것 같다. 새로운 제헌의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헌법 초안을 비준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즉, 칠레는 몇 달 안에 세 번째 헌법 제정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이 취할 정확한 방법은 여전히 논쟁 중이며, 관련된 이해관계를 넘어 설명된 두 가지 진단 중 어느 것이 적절한 지에 달려 있다. 만약 반대가 다수 온건 세력의 요구의 결과이자 좌우 세력 간 대화의 산물로 간주된다면, 무소속

후보출마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진단에 반하는 한 측면은 반(反)정당 정서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유효해 보인다는 것이다. 크리테리아(Criteria)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는 2020년 10월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이 새로운 제헌의회 의원들로 비정당 후보들을 선호했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사에서는 이미 2년 전 다수였던 “전문가들”에 대한 선호도가 이 기간에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대조적으로 “일반인”에 대한 지지는 37%에서 20%로 곤두박질친 반면, 전문가에 대한 요구는 63%에서 80%로 증가했다. 이것은 “위”와 “아래” 사이의 갈등에 대한 해석을 어렵게 하고, 합의하기가 더 쉬운 심의기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를 강화할 수 있다.

반면 진단이 정체성 논쟁을 강조한다면, 헌법 제정 과정에서 유지되어야 할 원주민 의식수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새로운 헌법 제정 과정은 애국적이고 상징적 측면들에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특징을 보여줄 것이다. 원래의 제헌 과정이 끝날 무렵 이미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칠레 국기가 새 헌법의 상징으로 선택된 것은 괜한 일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다민족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을 훨씬 넘어 긍정적인 신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칠레 시인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은 국가 공동체가 개인적 정체성의 정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조국은 어린 시절의 풍경”이라고 말하곤 했다.

헌법 제정 과정을 궁극적으로 지속하는 여정은 간단하지 않다. 국민 투표의 큰 승리에 고무된 일부 우파 세력은 제헌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거 보다는 새 헌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주장하고 있다. 가장 급진적인 우파 세력들은 심지어 국민투표 결과를 현행 헌법의 비준으로 해석하려고

10) Agenda Criteria, 7/2022, disponible en <https://www.criteria.cl/#c-acc...>

한다.

칠레 정치가 직면한 도전은 마침내 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헌법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대들을 배반할 경우에 이 과정에 대한 지지와 희망이 얼마나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성훈 옮김